

국민계정의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국민계정통계는 경제동향 분석과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국가간 경제수준 비교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신상품 등장, 기존 상품 사양화 등으로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국민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주기적으로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에 한국은행은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준년 개편 과정에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분배 국민소득 통계 제공 확대, 정부계정 개선, 분류체계 재정비, 기타 추계방법 개선 등의 작업도 수행하였다.

2015년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실상의 올바른 파악,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정부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자료로서 유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계정 주요지표와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GDP 등 총량지표를 1953년부터 소급·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장기 시계열 분석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I. 기준년 개편 필요성

II. 기준년 개편 연혁 및 개편대상 계열

III. 주요 개편 내용

IV. 주요 경제지표의 신·구계열 비교

V. 주요 경제지표로 본 우리경제의 변화 추이

VI. 기대 효과

I. 기준년 개편 필요성

국민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지출하고 소득을 분배하는 순환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국민경제의 흐름을 일정한 계정의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로 이를 통해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 및 이에 수반되는 자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민계정은 경제동향 분석과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국가간 경제수준 비교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국민계정은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신상품 등장, 기존 상품 사양화 등으로 국민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기준년 개편을 통해 현실반영도를 높여야 한다.¹⁾ 2015년 기준년 개편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2010년 이후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체계 및 생산기술 변화 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비교년 국민계정 추계시 기준년 부가가치율 및 최종수요율을 적용하는 부문의 경우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경제현상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게 되는데 기준년 개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실측 산업연관표(I-O) 작성 결과와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센서스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경제의 구조 및 규모 등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주요 기초통계와 기준년을 일치시킴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비교년 국민계정 추계에 이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물가통계와 산업생산지수 등과 같은 주요 기초통계의 기준년과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일치시킴으로써 통계이용자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국민계정과 여타 기초통계를 보다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와 같은 통상적인 기준년 개편의 필요성 이외에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하며, 정부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자료로서 국민계정의 유용성을 높이는 등 최근의 경제환경과 통계수요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1) 국민계정은 주요 기초자료의 작성주기에 맞추어 통상 5년(0, 5로 끝나는 연도)마다 기준년이 개편된다. 호주(매년)와 영국(3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기준년을 변경하고 있다.

II . 기준년 개편 연혁 및 개편대상 계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1957년 한국은행이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편제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민계정은 1953년 UN이 발표한 「국민계정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 : 1953 SNA)」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 후 1968년 UN이 국민경제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1968 SNA」를 완성하고 회원국에 이 체계에 의한 국민계정 편제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였으며 1989년에는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4대 국민계정을 작성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경제의 서비스화 및 세계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93년 UN은 「1993 SNA」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은행은 1995년 및 2000년 기준년 개편시 이를 이행하고 2005년 기준년 개편시에는 연쇄가중법과 지출접근법을 도입함으로써 국민계정의 현실적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 R&D 등 무형자산의 확대, 다국적기업의 확산과 같은 경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2008년 UN은 「2008 SNA」를 발표하였고 한국은행은 2010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2008 SNA」를 이행하고 2014년 5월부터는 국민대차대조표를 편제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5대 국민계정을 완성하였다. 한국은행은 금번 2015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대내외 통계수요에 부응하고자 분배국민소득 및 정부계정을 강화하고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하였다. 한편 1955년 이래 5년 주기로 11회에 걸쳐 국민계정의 기준년이 변경되었으며 이번 2015년 기준년 개편은 제12차 개편에 해당한다.

〈표 1〉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 연혁

개편회차	기준년	공표연도	대상기간	비고
	1955년	1958년	1953~1957년	· 1953 SNA에 의거 작성
1차	1960년	1964년	1953~1963년	
2차	1965년	1967년	1953~1966년	
3차	1970년	1972년	1953~1971년	
4차	1975년	1978년	1953~1977년	
5차	1980년	1984년	1970~1982년	
	1980년	1986년	1980~1984년	
	1980년	1987년	1970~1985년	· 1968 SNA 이행
6차	1985년	1989년	1970~1987년	· 4대 국민계정 작성(국민대차대조표 제외) ·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연결
7차	1990년	1994년	1970~1992년	
8차	1995년	1999년	1970~1997년	· 1993 SNA 부분 이행
9차	2000년	2004년	1970~2002년	· 1993 SNA 이행 완료
10차	2005년	2009년	1970~2007년	· 연쇄가중법 및 지출접근법 도입
11차	2010년	2014년	1953~2013년	· 2008 SNA 이행 · 5대 국민계정 작성(국민대차대조표 작성) · 공표 시계열 확장(1970년 → 1953년)
12차	2015년	2019년	1953~2018년	· 분배 국민소득 및 정부계정 강화 등

2015년 기준년 개편은 1953년 이후의 계열을 대상으로 하되 기초자료 여건 및 추계일정 등을 감안하여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제1단계 개편으로 2000~18년중 종합계정, 2010~18년중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소득계정·자본계정과 15개 부표를 먼저 작성하여 2019년 6월에 공표하였다. 제2단계 개편에서는 1953~99년중 종합계정, 1975~2009년중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소득계정·자본계정과 18개 부표를 작성하여 2019년 12월에 공표하였다.

〈표 2〉 통계표별 공표 시계열 및 수정내역

통계표	공표 시계열		수정 내역
	1차 개편	2차 개편	
I. 종합계정			
1. 국내총생산과 지출	00~18년	70~99년	
2.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00~18년	70~99년	
3. 자본거래	00~18년	70~99년	
4. 국외거래	00~18년	70~99년	
II. 제도부문별 생산계정	10~17년	00~09년	
III.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소득발생계정	10~17년	..	
본원소득분배계정	10~18년	75~09년	수정 ¹⁾
2차소득분배계정	10~18년	75~09년	
현물소득재분배계정	10~18년	75~09년	
소득사용계정	10~18년	75~09년	
IV.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10~17년	75~09년	
〈부표〉 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00~18년	53~99년 ²⁾	
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00~18년	53~99년 ²⁾	
3.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00~17년	70~99년	
4.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10~18년	70~09년	
5. 자본재형태별 주체별 총자본형성	00~18년	70~99년	
6-1.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	..	70~17년	수정 ³⁾
6-2. 경제활동별 자본재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	..	05~17년	수정 ³⁾
7.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	05~18년	
8.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00~18년	70~18년	수정 ⁴⁾
9.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00~18년	70~99년	
10.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00~18년	70~99년	
11.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00~17년	70~99년	
12.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	10~17년	70~09년	
13.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10~17년	70~09년	
14. 일반정부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10~18년	70~09년	
15. 공공부문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10~17년	07~09년	
16. 국외거래	00~18년	70~99년	수정 ⁵⁾
17. 총저축과 총투자	00~18년	70~99년	

주 : 1) 1차 개편 시계열 대상 일부 항목 추가
 2) 분기는 1960~99년
 3) 제목 수정 및 일부 항목 삭제
 4) 분류기준 변경으로 1차 개편 시계열 전체가 2차 개편시 수정됨
 5) 일부 항목 삭제

III. 주요 개편내용

금번 제12차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정부계정 개선, 분류체계 재정비, 기타 추계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다.

1.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

기준년을 2015년으로 변경하면서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를 적용하였고 부분분류를 재정비하여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였다.²⁾ 그리고 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경제총조사(2017.6월 공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2019.2월 공표) 등을 토대로 산업별 총산출 및 부가가치와 부문별 최종수요를 추계하였다. 또한 2015년 기준년으로 개편된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소비자·수출입물가 지수 등을 반영하여 주요 기초통계와의 기준년을 일치시켰다.

〈표 3〉 국민소득통계 주요 기초자료의 기준년(2015년) 개편 현황

통계명	작성기관	개편완료시기	주요 이용부문
■ 생산·출하·재고지수	통계청	2018. 3월	제조업 생산 및 재고증감 추계 등
■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2018. 3월	서비스업 생산 추계 등
■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2016.12월	디플레이터 산정
■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2019. 5월	"
■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2019. 5월	"

2) 기준년 변경에 따른 상대가격체계, 부분분류체계, 생산기술구조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2010년 기준년) 모든 연간 및 분기 명목·실질 시계열을 2015년 기준년으로 소급, 개편하였다.

2.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비소프트웨어 기업이 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지출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하여 SNA 이행 수준을 높이고 자가개발 소프트웨어가 장기에 걸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였다. 한편 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은 이미 자산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이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고 자산화됨에 따라 기업의 총영업잉여와 투자가 늘어나고 GDP도 증가하게 되었다.

〈표 4〉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처리방법 변경(비용 → 자산) 예

		(기존)			(개편후)		
		GDP	지출GDP		GDP	지출GDP	
			소비	투자		소비	투자
생산 GDP	산출액(A)	200			200		
	중간투입(B)	150			130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20)			[-20]		
분배 GDP	부가가치(A-B)	50	30	20	70	30	40
	- 피용자보수	30			[+20]		[+20]
	- 총영업잉여	20			40		[+20]

주 : [] 내는 개편후 증감액

3.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P2P) 이루어지는 숙박공유(Airbnb),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하였다. 단, 포착 필요성과 추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디지털·공유 경제의 측정대상을 개인간 거래(P2P)로 한정하고 이를 가계가 생산·소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³⁾ 미국, 일본 등 주요

3) 기초자료 여건,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포착 필요성과 추계 가능성이 높은 경제활동을 선정하였다.

국도 생산자가 법인기업인 거래(B2C, B2B)의 경우 대부분 디지털·공유 경제가 아닌 디지털화된 사업모델(digitalized business model)로 분류하고 있다.⁴⁾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방법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이나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공유 경제를 ‘개인들이 유희자산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상호간 거래(P2P; Peer to Peer)한 것’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다.⁵⁾

2018년 우리나라의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는 GDP의 0.01%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원에서 2018년 1,978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기존에 1,181억원이 포착되어 있으며 추가로 798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5〉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

		(억원)			
		2015	2016	2017	2018
전체(A+B)		204	581	1,356	1,978
		〈0.001〉	〈0.004〉 (184.9)	〈0.008〉 (133.5)	〈0.011〉 (45.9)
기포착(A)		167	429	821	1,181
미포착(B)		37	152	534	798

주 : 1) 〈 〉 내는 GDP(기초가격 총부가가치 기준) 대비 비중(%)
2)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앞으로 한국은행은 국내외 논의 참여,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통계의 디지털·공유 경제 측정방식의 정도를 제고하고 포괄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주요국의 디지털경제와 관련한 위성계정 및 공급사용료 개발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⁶⁾하면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디지털·공유 경제 관련 행정자료, 기업 및 가계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공유 경제 관련 국제적 합의가 마련될 경우 국민소득통계에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4) 우리나라에서 B2C 형태로 운영되는 차량공유와 금융기관에 의해 중개되는 P2P 대출 등은 디지털화된 사업 모델로서 디지털·공유 경제 포괄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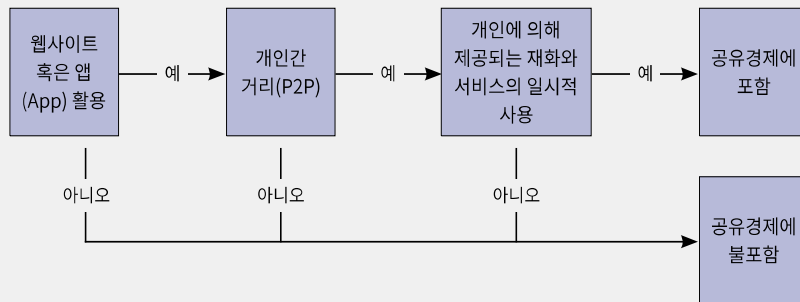
5) 세부 내용은 <참고 1> 영국 통계청(ONS)의 공유경제 식별 의사결정트리; <참고 2> 주요국 국민계정 작성기관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참조.

6) 미국과 캐나다는 국민계정의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으로서 디지털경제 위성계정의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는 디지털경제 공급사용료를 개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참고 1>

영국 통계청(ONS)의 공유경제 식별 의사결정트리

□ 영국 통계청은 IMF 통계포럼(2017년)에서 ① 디지털 중개플랫폼 의존성, ② 개인간 거래 여부, ③ 일시적 사용(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 따라 공유경제를 식별하는 의사결정트리를 아래와 같이 제시



자료 : The feasibility of measuring the sharing economy(Pauline Beck, 2017 Fifth IMF Statistical Forum)

〈참고 2〉

주요국 국민계정 작성기관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 주요국 국민계정 작성기관은 공유경제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일본 등은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창출된 재화 및 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P2P)’를 공유경제로 인식

▪ 미 국 : *BEA did not attempt to include partially digital items in the preliminary estimates or in these updated estimates. This means that some components of the digital economy, like peer-to-peer (P2P) e-commerce, also known as the sharing economy, are excluded from both sets of estimates.*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An Update Incorporating Data from the 2018 Comprehensive Update of the Industry Economic Accounts, **BEA, 2019.4월**)

▪ 일 본 :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를 확정하기 곤란한 상황이지만,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공유경제를 개인 등이 보유하는 유휴자산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른 개인 등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제활동으로 파악. 공유서비스로 불리는 임대업 등은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検討会議 第二次報告書(案), 내각부, 2019.4월)

▪ 캐나다 : *The sharing economy—which can be defined as an activity facilitated by digital platforms where people rent their skills and make their resources available for money—has the potential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Canadian economy. In an attempt to measure its impact, Statistics Canada asked people living in Canada the extent to which they used or offered peer-to-peer ride services and private accommodation services.* (The sharing economy in Canada, **Statistics Canada, 2017.2월**)

▪ 영 국 : We define the sharing economy as, “the sharing of under-used assets through completing peer-to-peer transactions that are only viable through digital intermediation, allowing parties to benefit from usage outside of the primary use of that asset.” (...)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is definition is likely to evolve alongside our understanding of how to measure sharing-economy activities. (The feasibility of measuring the sharing economy, **ONS, 2017.9월**)

4.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⁷⁾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⁸⁾하였으며, 추후에도 연간 확정시 가계 혼합소득을 공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2008 SNA에서는 가계 비법인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소득의 경우 피용자보수, 자본수익 등으로 분리하여 측정하기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포괄하는 혼합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표 6〉 가계 혼합소득의 신설

기존	개편후	비고
[본원소득분배계정(원천) 가계 영업잉여]	[본원소득분배계정(원천) 가계 영업잉여 (혼합소득)]	신설

정부의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이외에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과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⁹⁾의 경제주체별 소득비중을 ECOS(경제통계시스템, Economic Statistics System)를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¹⁰⁾

〈표 7〉 가계, 기업, 정부소득의 비중 공표 범위

	기존	개편후	비고
■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 기준 비중	미공표	공표 ¹⁾	신설
■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비중	공표 ²⁾	공표 ²⁾	
■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비중	미공표	공표 ¹⁾	신설

주 : 1) ECOS로 공표
2) 보도자료, ECOS로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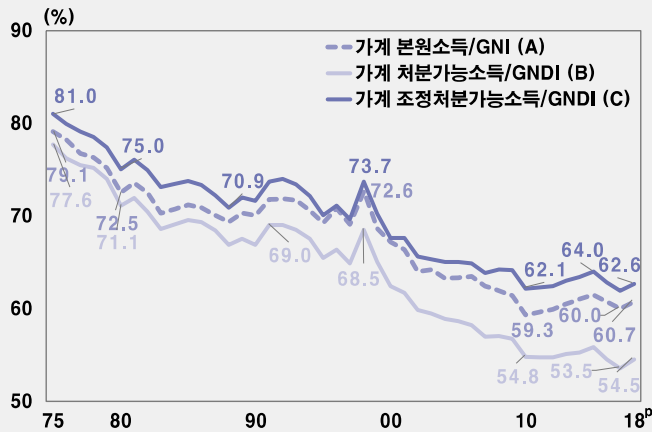
7) 2019년 5월말 기준 OECD 회원국 35개국중 32개국이 공표하고 있다.
 8) 우리나라의 가계 혼합소득은 2010~17년중 65~68조원 수준이며, 2011~15년중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17년중 증가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주거서비스 생산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잉여까지 포함한, 가계 영업잉여 총액을 공표하였다.
 9)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 사회적현물이전 =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한편 사회적현물이전은 국내 제도부문간 거래로서 국민경제 전체로는 0이 된다.
 10) 다양한 기준의 경제주체별 소득비중을 활용한 간단한 분석의 예는 ‘<참고 3> 가계소득 비중 변화와 가계와 정부간 소득이전 활동’을 참조.

〈참고 3〉

가계소득 비중 변화와 가계와 정부간 소득이전 활동

-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가계소득의 비중은 모두 1975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회복하는 모습

국민소득 지표별 가계소득 비중



- 한편 2000년대 이후 각 지표간 가계소득의 비중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가계와 정부간 소득이전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냄
 -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국민총소득 기준의 가계소득 비중간 차이(B-A)는 주로 경상세, 사회부담금 등 가계에서 정부로의 현금이전을 의미
 -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가계소득 비중간 차이(C-B)는 의료보험, 무상보육 등 정부에서 가계로의 현물이전을 나타냄

가계소득의 비중 변화와 가계와 정부간 소득이전 활동

	(기간중 연평균, %)					
	75~79	80~89	90~99	00~09	10~18 ^p	75~18 ^p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 기준 ¹⁾ (A)	77.1	71.1	70.6	63.7	60.4	67.8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²⁾ (B)	75.7	69.3	67.1	59.0	54.8	64.2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 GNDI) 기준 ³⁾ (C)	79.2	73.5	71.9	65.3	62.7	69.7
가계와 정부간 소득이전 (C-A, %p)	2.1	2.3	1.3	1.6	2.4	1.9
가계에서 정부로의 현금이전 (B-A, %p)	-1.4	-1.8	-3.5	-4.8	-5.6	-3.6
정부에서 가계로의 현물이전 (C-B, %p)	3.5	4.2	4.8	6.3	8.0	5.5

주 : 1)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 본원소득(피용자보수 + 총영업잉여 + 순재산소득)의 비중
 2)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 GNI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중 가계 처분가능소득(가계 본원소득 - 경상세 - 사회부담금 + 사회수혜금 + 순기타경상이전)의 비중
 3)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중 가계 조정처분가능소득(가계 처분가능소득 + 순사회적현물이전)의 비중

5. 정부계정 개선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사회적현물이전의 일부)로 변경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였다.¹¹⁾ 2008 SNA에서는 가계가 보건 또는 교육 등을 위한 지출을 한 후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경우 사회보험수혜금이나 피용자보수의 일부가 아닌 정부의 보건(교육)서비스 지출로 포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료,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¹²⁾ 등이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에 포함되었다. 한편 이로 인해 정부소비 규모는 확대되나 해당 금액만큼 민간소비 규모는 축소되므로 GDP 총액은 변동이 없다.

〈표 8〉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의 주요 항목

기존	개편후	2015년 규모
건강보험 급여비, 직업훈련비, 국공립 초·중고 무상급식, 국공립대 국가장학금 등	좌동	
	보육료,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 ¹²⁾ 등	12.7조원

또한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고용관련 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 보조금(기타생산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하였다. 한편 이로 인해 순생산 및 수입세의 차감항목인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 순생산 및 수입세가 줄어들지만 동 감소분만큼 영업잉여가 확대되므로 GDP 총액은 변동이 없다.

11) 정부소비(정부의 최종소비) = 정부 총산출(정부의 서비스생산) - 상품비상품판매(민간에 일정가격으로 판매한 정부의 서비스생산) + 사회보장현물수혜(정부가 구입하여 가계에 무상으로 현물 지급한 민간의 서비스생산)

12)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특정 계층에 대해 제공하는, 지불을 보증하는 증표로서 수요자가 결제시 특정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급자는 동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하여 자금을 수취한다. (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문화·체육·여행바우처 등)

6. 분류체계 재정비

가. 경제활동별 분류 조정

경제활동별 분류를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7월 시행)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였다. 기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던 전기 장비 제조업(예: 전지, 태양광 모듈 등)을 신설하였다. 건설업 분류기준을 ‘공사종류’에서 ‘업종’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건물건설, 토목건설에 포함되어 있던 전문건설업을 신설하고 기존 건축수선을 건물건설업, 전문건설업에 통합하였다.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농림어업서비스업은 축산업, 임업, 어업에 통합하였다. 이외에도 다음 표와 같이 경제활동 분류를 변경하고 명칭 등을 수정하였다.

〈표 9〉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 분류기준

기존	개편후	비고
농림어업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농림어업서비스	농림어업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통합 ¹⁾
광업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정밀기기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광업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	추가 ²⁾ 신설 ³⁾ 추가 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기업 가스, 증기 및 운수업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기업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건물건설 주거용 건물건설 비주거용 건물건설 토목건설	건설업 건물건설업 주거용 건물건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설 ⁵⁾ 통합 ⁶⁾
건축수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통신업 출판, 방송, 영화, 정보서비스 사업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통신업 출판, 방송, 영상, 정보서비스 사업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추가 ⁷⁾ 추가 ⁸⁾ 추가 ⁹⁾ 추가 ¹⁰⁾ 신설, 추가 ¹¹⁾ 신설

주 : 1) 개편후 축산업, 임업, 어업으로 각각 통합
 2) 기존 정밀기기 제조업을 포함
 3) 기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에서 분리
 4) 기존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포함
 5) 기존 건물건설, 토목건설에서 분리
 6) 개편후 건물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각각 통합
 7) 기존 통신업의 우편업을 포함
 8) 기존 각 산업의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을 포함
 9) 기존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장비 및 용품 임대를 포함
 10) 기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사회보장을 포함
 11) 기존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여행관련서비스업을 포함

나.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 새 분류기준 이행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 기준을 국제기준 변경(1999 COICOP → 2018 COICOP) 및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였다. 참고로 COICOP은 UN이 제정한 목적별 분류에 의한 가계소비 분류체계(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로 가계의 재화 및 서비스 소비를 거래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0〉 가계소비 목적별 분류(중분류 기준)의 명칭 변경 및 분류 이동

	기존	개편후	비고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
2	주류 및 담배	주류 및 담배	-
3	의류 및 신발	의류 및 신발	-
4	임료 및 수도광열	임대료 및 수도광열	명칭 변경
5	가계시설 및 운영	가계시설 및 운영	-
6	의료보건	의료보건	-
7	교통	교통	분류 이동('우편서비스'는 기존 '통신'에서 '교통'으로 이동)
8	통신	정보 통신	명칭 변경 및 분류 이동('음향, 영상수신, 기록 및 재생기기'는 기존 '오락문화'에서 '정보 통신'으로 이동)
9	오락문화	오락, 스포츠 및 문화	명칭 변경
10	교육	교육 서비스	명칭 변경
11	음식숙박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명칭 변경
12	기타	기타	-

다. 통계표 정비

국외거래 통계표(부표) 항목 중 국제수지통계, 자금순환표에서 각각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수출/수입, 국외 금융자산/부채 순증의 하위항목을 삭제하여 통계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소화하였다.

〈표 11〉 개편후 국외거래 통계표(부표)

항목	비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화(f.o.b.) 서비스 국외수취 요소소득 국외로부터의 피용자보수 국외로부터의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로부터의 경상이전 수취(A)	하위항목 삭제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재화(f.o.b.) 서비스 국외지급 요소소득 국외에 대한 피용자보수 국외에 대한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에 대한 경상이전 지급(B)	하위항목 삭제
경상계정잉여(C=A-B)	
순자본이전(D)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E)	
오차 및 누락(F=G-(C+D-E))	
자금과부족(G=H-I)	
국외 금융자산 순증(H)	하위항목 삭제
국외 부채 순증(I)	하위항목 삭제

또한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부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하여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을 높였다. 경제활동별로 구분되지 않는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총자본형성 항목을 삭제하고 경제활동별 연구개발은 ECOS로만 공표하기로 하였다.

7. 기타 추계방법 등 개선

각 산업으로부터 분리된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을 별도로 추계하고, 주거서비스 생산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소득통계(생산계정)와 국민대차대조표(순자본소득)간 제도부문별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 추계방법도 개선하였다.

IV. 주요 경제지표의 신·구계열 비교

1. 경제규모

2015년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1,658조원으로 구계열(1,564조원)에 비해 94조원 확대되었다. 이는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국제수지표 신계열 등 기초자료 확충과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자산화 등 추계방법 개선에 주로 기인한다. 경제규모의 신계열과 구계열간 차이는 기준년에서 과거로 갈수록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12〉 명목GDP 신·구계열 및 베이스업률 (조원)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8 ^p
신계열 (A)	0.05	0.25	3	40	201	652	1,323	1,658	1,893
구계열 (B)	0.05	0.25	3	39	198	635	1,265	1,564	1,782
베이스업금액 (A-B)	0.00	0.00	0	0	3	16	57	94	111
베이스업률 ((A-B)/B, %)	0.0	0.0	0.1	0.6	1.4	2.6	4.5	6.0	6.2

한편 금번 베이스업률은 6.0%로 과거 개편시(1980~2010년중 기준년 개편 평균 7.4%)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13〉 과거 기준년 개편시 베이스업률¹⁾ (%)

기준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980~2010 평균
베이스업률	8.4	7.1	3.9	7.2	10.9	6.8	7.8	7.4

주 : 1) (개편후 GDP - 개편전 GDP) ÷ 개편전 GDP

2. 1인당 국민소득

2015년 신계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미달러화 기준)은 28,814달러로 구계열(27,171달러)에 비해 1,643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명목GDP 규모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1인당 GNI의 3만달러 상회시기는 종전 2018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표 14〉

1인당 GNI 신·구계열

	(미달러)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7	2018 ^p
신계열 (A)	67	80	258	1,699	6,601	12,179	23,118	28,814	31,734	33,434
구계열 (B)	67	80	257	1,686	6,505	11,865	22,105	27,171	29,745	31,349
신-구 차이 (A-B)	0	0	0	12	97	313	1,012	1,643	1,990	2,084

2015년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미달러화 기준)은 16,038달러로 구계열(15,487달러)에 비해 550달러 증가하였다.

〈표 15〉

1인당 PGDI 신·구계열

	(미달러)						
	1975 ¹⁾	1980	1990	2000	2010	2015	2017
신계열 (A)	477	1,215	4,427	7,600	12,611	16,038	16,919
구계열 (B)	472	1,193	4,340	7,462	12,235	15,487	16,573
신-구 차이 (A-B)	5	22	87	137	376	550	346

주 : 1)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작성 시작년도인 1975년부터 공표

3. 경제성장률

기준년 개편 결과 1954~2018년중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신계열)은 7.2%로 구계열 성장률 7.1%에 비해 0.1%p 상승하였다. 실질GDP 성장률의 연간 추세는 구계열과 거의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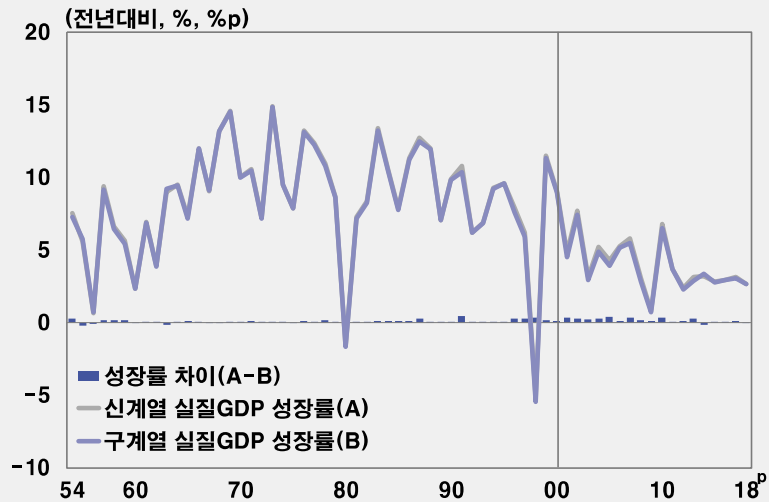
〈표 16〉

실질GDP 성장률 신·구계열

	(기간중 연평균, %)							
	54~59	60~69	70~79	80~89	90~99	00~09	10~18 ^p	54~18 ^p
신계열 (A)	5.9	8.7	10.5	8.8	7.2	4.9	3.4	7.2
구계열 (B)	5.8	8.7	10.4	8.7	7.0	4.7	3.3	7.1
신-구 차이 (A-B, %p)	0.1	0.0	0.1	0.1	0.2	0.2	0.1	0.1

〈그림 1〉

실질GDP 연간 성장률 신·구계열



4. 저축률과 투자율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은 시기별로 신·구계열간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2015년 총저축률은 36.4%로 구계열(35.6%)에 비해 0.8%p, 국내총투자율은 29.5%로 구계열(28.9%)보다 0.6%p 상승하였다.

〈표 17〉 총저축률¹⁾ 및 국내총투자율²⁾ 신·구계열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8 ^p
총저축률	신계열 (A)	10.9	8.1	18.5	25.2	38.9	34.2	35.2	36.4	35.8
	구계열 (B)	10.9	8.1	18.4	25.4	39.3	34.4	35.0	35.6	34.8
	신-구 차이 (A-B, %p)	0.0	0.0	0.1	-0.3	-0.3	-0.3	0.2	0.8	1.0
국내총투자율	신계열 (C)	14.7	9.7	25.6	34.1	39.5	33.1	32.6	29.5	31.4
	구계열 (D)	14.7	9.7	25.7	34.6	39.5	33.2	32.1	28.9	30.4
	신-구 차이 (C-D, %p)	0.0	0.0	0.0	-0.4	-0.1	-0.1	0.5	0.6	1.0

주 : 1) 총저축률 = 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최종소비]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2) 국내총투자율 = 총자본형성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가계순저축률도 신·구계열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기간중 가계소비가 가계소득보다 전반적으로 상향 수정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18〉 가계순저축률¹⁾ 신·구계열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7
신계열 (A)		4.6	-3.2	3.1	8.6	21.2	6.5	2.8	8.4	6.5
구계열 (B)		4.6	-3.3	2.7	8.2	21.7	8.4	4.1	8.1	7.6
신-구 차이 (A-B, %p)		0.0	0.1	0.4	0.4	-0.6	-1.9	-1.3	0.2	-1.1

주 : 1) 가계순저축률 = $\frac{\text{가계순저축}}{\text{가계순조정처분가능소득} + \text{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표 19〉

가계순저축률 구성항목별 변동

(조원)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7
가계 소득 ¹⁾	신계열 (A)	0.0	0.2	2.2	29.0	139.9	416.0	786.2	1,026.3	1,097.7
	구계열 (B)	0.0	0.2	2.2	28.3	137.0	407.7	757.4	973.2	1,053.7
	신-구 차이 (A-B)	0.0	0.0	0.0	0.7	2.9	8.3	28.8	53.1	44.1
가계 소비 ²⁾	신계열 (C)	0.0	0.2	2.1	26.5	110.3	388.9	764.4	940.5	1,026.5
	구계열 (D)	0.0	0.2	2.1	26.0	107.2	373.3	726.3	894.0	973.6
	신-구 차이 (C-D)	0.0	0.0	0.0	0.5	3.1	15.7	38.1	46.6	53.0
가계 순저축	신계열 (E)	0.0	0.0	0.1	2.5	29.6	27.0	21.9	85.8	71.2
	구계열 (F)	0.0	0.0	0.1	2.3	29.8	34.4	31.1	79.3	80.1
	신-구 차이 (E-F)	0.0	0.0	0.0	0.2	-0.2	-7.4	-9.3	6.5	-8.9

주 : 1) 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기준
 2) 가계 실제최종소비(가계 최종소비 + 정부의 사회적현물이전) 기준

5. 경제구조

2015년 기준으로 생산측면에서는 서비스업(구계열 59.4% → 신계열 60.6%)과 건설업(5.2% → 5.3%)의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29.8% → 29.0%) 등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제조업에 주로 포함되어 있던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이 서비스업(사업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가운데 센서스 등 기초자료가 확충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아졌다.

지출측면에서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5.8% → 6.0%)와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0.4% → 0.5%)의 GDP 대비 비중이 각각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자산화, 센서스 등 기초자료 변경 등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민간소비(49.3% → 48.5%) 등 여타 부분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분배측면에서는 영업잉여(26.0% → 27.0%), 피용자보수(44.7% → 45.2%)의 GNDI 대비 비중이 행정자료 정보 등이 보강된 기초자료가 반영되면서 상승하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10.2% → 9.4%), 고정자본소모(19.6% → 18.7%)의 비중은 각각 기초자료 반영 및 조세분류 기준 변경, 자산 내용연수 변경 등으로 하락하였다.

〈표 20〉

2015년 기준년의 경제구조

	2015 (신)	2015 (구)	(%) (신-구, %p)
[생산구조¹⁾]			
농림어업	2.2	2.3	-0.1
제조업	29.0	29.8	-0.8
전기가스수도사업	2.7	3.2	-0.4
건설업	5.3	5.2	0.1
서비스업	60.6	59.4	1.2
[지출구조²⁾]			
최종소비지출	63.6	64.3	-0.7
민간	48.5	49.3	-0.8
정부	15.1	15.0	0.1
총고정자본형성	29.0	29.3	-0.3
건설투자	14.5	14.9	-0.4
설비투자	8.6	8.6	0.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0	5.8	0.2
민간	24.7	25.0	-0.3
정부	4.3	4.3	0.0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0.5	-0.4	0.9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3.0	45.3	-2.3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36.1	38.4	-2.2
[분배구조³⁾]			
피용자보수 ⁴⁾	45.2	44.7	0.5
영업잉여 ⁴⁾	27.0	26.0	1.0
고정자본소모	18.7	19.6	-0.9
순생산 및 수입세	9.4	10.2	-0.7
국외순수취경상이전	-0.3	-0.4	0.1

주 : 1) 명목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2) 명목GDP 대비 비중

3) 명목GNDI 대비 비중

4)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포함

V. 주요 경제지표로 본 우리경제의 변화 추이

1. 경제규모 및 1인당 국민소득

2015년 기준년 개편 시계열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명목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2018년 1,893조원으로 39,665배 확대되었다.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명목 GNI)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1인당 GNI, 미달러 기준)도 1953년 67달러에서 2018년 33,434달러로 503배 늘어났다.

〈표 21〉 명목GDP와 1인당 GNI^{1),2)}

	명목GDP (조원, 억달러)		1인당 GNI (만원, 달러)	
1953	0.05	(13)	0.24	(67)
1960	0.25	(20)	1.01	(80)
1970	3	(82)	9	(258)
1980	40	(653)	103	(1,699)
1990	201	(2,833)	467	(6,601)
2000	652	(5,764)	1,377	(12,179)
2010	1,323	(11,439)	2,673	(23,118)
2018 ^p	1,893	(17,209)	3,679	(33,434)

주 : 1) 가계, 기업, 정부 등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명목GNI = 명목GDP +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인구수(연앙추계인구 기준, 다만 연앙추계인구가 공표되지 않은 1953~59년은 인구 총조사 등을 이용하여 추정)로 나눈 지표
2) () 내는 미달러 기준

1954~2018년중 미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연평균 10.0%) 요인을 분해해 보면 실질소득 증가(6.9%p)와 물가 상승(10.0%p)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율(-5.4%p)은 원화가치 하락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22〉 1인당 GNI 증가율(미달러 기준) 분해¹⁾

	(기간중 연평균, %, %p)							
	54~59	60~69	70~79	80~89	90~99	00~09	10~18 ^p	54~18 ^p
1인당 GNI 증가율	3.6	10.4	22.8	12.9	6.2	6.1	6.4	10.0
① 실질소득 증가(+)	5.9	8.9	9.9	9.0	6.4	4.1	3.8	6.9
② 물가 상승(+)	21.8	15.8	18.7	8.0	6.6	3.3	1.3	10.0
③ 환율 상승(-)	21.1	11.3	4.4	3.0	5.9	0.7	-1.6	5.4
④ 인구 증가(-)	2.9	2.6	1.8	1.2	0.9	0.6	0.5	1.4

주 : 1) 1인당 GNI(미달러 기준) 증가율을 ① 실질GNI 증가율(플러스(+)) 요인, ② GNI 디플레이터 상승률(+), ③ 원·달러 환율 변동률(-), ④ 추계인구 증가율(-)로 분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1인당 PGDI, 미달러 기준)은 1975년 477달러에서 2018년 18,144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1인당 PGDI의 1인당 GNI 대비 비율은 1975년에 77.9%에 달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54.3%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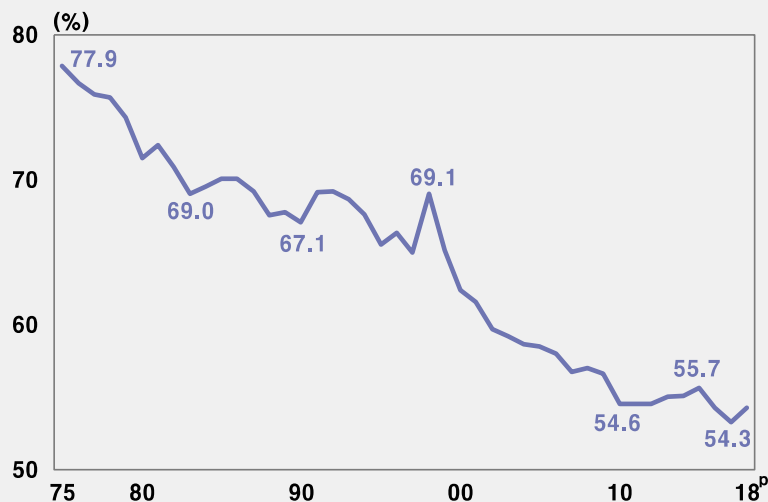
〈표 23〉 1인당 PGDI¹⁾

(미달러)					
1975 ²⁾	1980	1990	2000	2010	2018 ^p
477	1,215	4,427	7,600	12,611	18,144

주 : 1) 가계총처분가능소득 = 가계총소득 + 가계순수취경상이전.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득으로 제한적이거나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작성 시작년도인 1975년부터 공표

〈그림 2〉 1인당 GNI 대비 1인당 PGDI의 비율



2. 경제성장률 및 실질소득 증가율

우리나라의 1954~2018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GDP 성장률)은 7.2%로 나타났다. 기간 별로 보면 1950년대 5.9% 이후 1970년대에 10.5%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낮아져 2010년대에는 3.4%를 기록하였다. 한편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GDI 증가율은 1980년대, 2010년대에는 유가 안정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실질GDP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1990~2000년대에는 ICT제품의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GDP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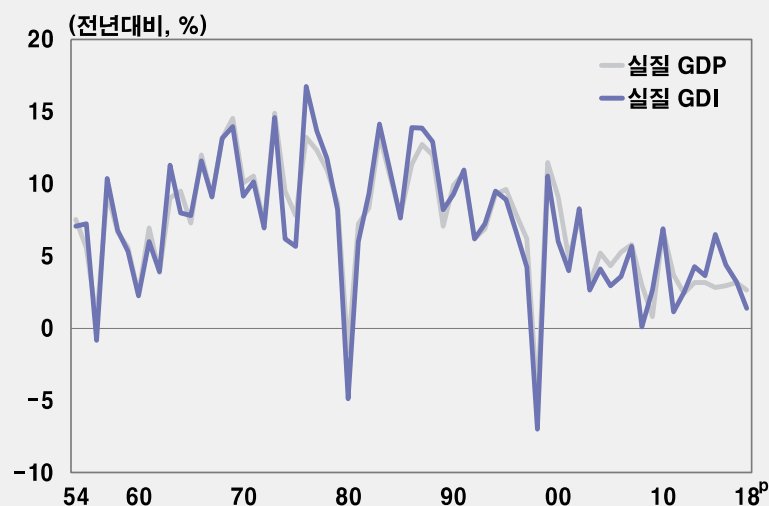
실질GDP 및 실질GDI 성장률

	(기간중 연평균, %)							
	54~59	60~69	70~79	80~89	90~99	00~09	10~18 ^p	54~18 ^p
실질GDP (A)	5.9	8.7	10.5	8.8	7.2	4.9	3.4	7.2
실질GDI1) (B)	5.9	8.6	10.2	9.1	6.5	4.0	3.8	7.0
차이 (B-A, %p)	0.1	-0.1	-0.3	0.3	-0.7	-0.9	0.3	-0.2
교역조건 변화율	1.3	-1.1	-1.2	0.8	-2.2	-2.6	0.8	-0.8
수출 디플레이터	31.8	14.7	13.7	7.0	1.8	0.8	-1.1	8.3
수입 디플레이터	30.1	15.9	15.1	6.2	4.1	3.5	-1.8	9.1

주 : 1) 실질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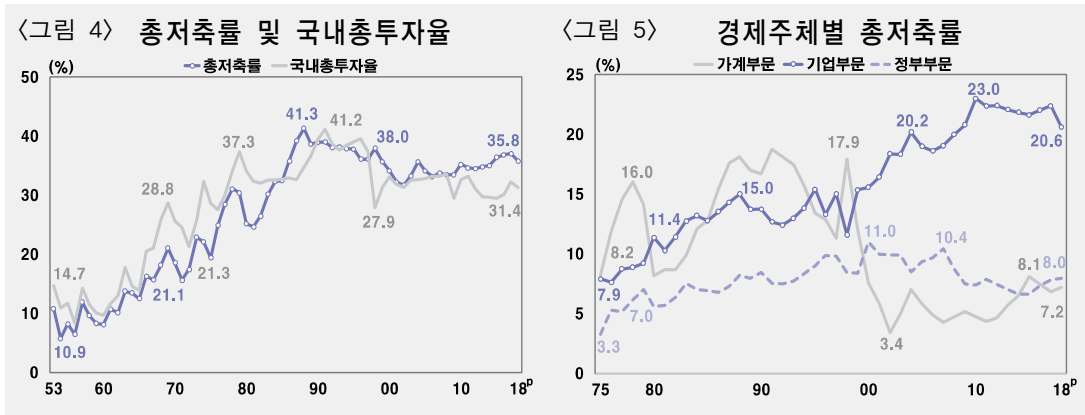
〈그림 3〉

실질GDP 및 실질GDI 연간 성장률



3. 저축률과 투자율

총저축률은 1980년대 후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여 1988년 41.3%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낮아져 2018년에는 35.8%를 기록하였다. 1975~2018년중 경제주체별 총저축률을 살펴보면 기업(7.9% → 20.6%) 부문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가계(8.2% → 7.2%) 부문은 등락을 나타내다가 2000년대 초반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대체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국내총투자율은 1991년 정점(41.2%)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표 25> 경제주체별 총저축률^{1),2)}, 국내총투자율³⁾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총저축률	10.9	8.1	18.5	25.2	38.9	34.2	35.2	35.8
가계	-	-	-	8.2	16.7	7.5	4.8	7.2
기업	-	-	-	11.4	13.7	15.6	23.0	20.6
정부	-	-	-	5.6	8.5	11.0	7.4	8.0
국내총투자율	14.7	9.7	25.6	34.1	39.5	33.1	32.6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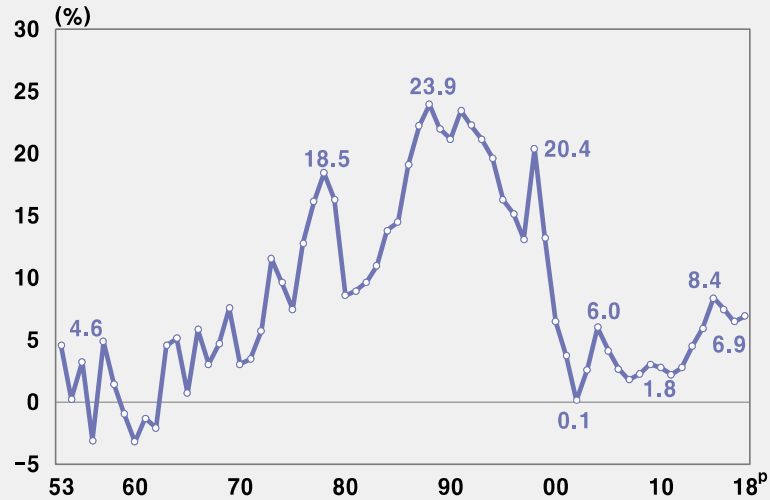
주 : 1) 총저축률 = 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최종소비]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2) 제도부문별 총저축률 = 제도부문별 총저축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3) 국내총투자율 = 총자본형성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한편 가계순저축률은 1988년 23.9%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02년 0.1%까지 낮아졌다가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6.9%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 보면 1960~80년대는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가계소비의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1990~2000년대에는 가

계 소비가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났으며 2010년대에는 가계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6〉

가계순저축률



〈표 26〉

가계순저축률¹⁾

(%)

연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가계순저축률 (%)	4.6	-3.2	3.1	8.6	21.2	6.5	2.8	6.9

주 : 1) 가계순저축률 = $\frac{\text{가계순저축}}{\text{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text{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표 27〉

가계순저축률과 가계소득¹⁾ 및 가계소비²⁾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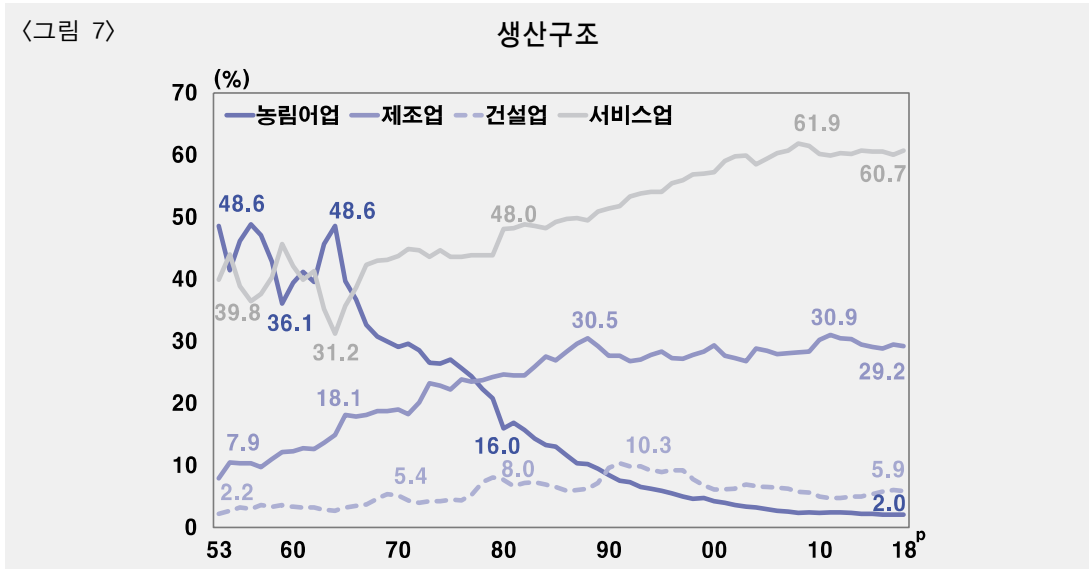
	54~59	60~69	70~79	80~89	90~99	00~09	10~18 ^p	54~18 ^p
가계순저축률 ³⁾	1.5 ⁴⁾	2.5	10.5	15.4	18.6	3.3	5.3	8.5
가계소득 ¹⁾ 증가율 ⁵⁾ (A)	27.3	25.1	30.4	16.9	12.9	6.5	5.0	17.0
가계소비 ²⁾ 증가율 ⁵⁾ (B)	28.5	24.0	29.1	16.1	14.1	7.6	4.5	16.9
차이(A-B, %p)	-1.2	1.1	1.3	0.8	-1.2	-1.2	0.5	0.0
명목GDP 성장률 ⁵⁾	29.1	25.9	30.8	17.7	13.6	7.4	5.1	17.7

주 : 1) 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기준
 2) 가계 실제최종소비(가계 최종소비 + 정부의 사회적현물이전) 기준
 3) 매년 가계순저축률의 산술평균
 4) 1953~59년 기준
 5) 기간중 연평균

4. 경제구조

가. 생산구조

1953~2018년중 생산구조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의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1953년 48.6%에서 2018년 2.0%로 크게 축소된 반면, 제조업(7.9% → 29.2%)과 서비스업(39.8% → 60.7%)의 비중은 큰 폭 확대되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 속도가 크게 느려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 비중은 각각 2000년대 초반 및 1990년대 초반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점차 축소되었다.



〈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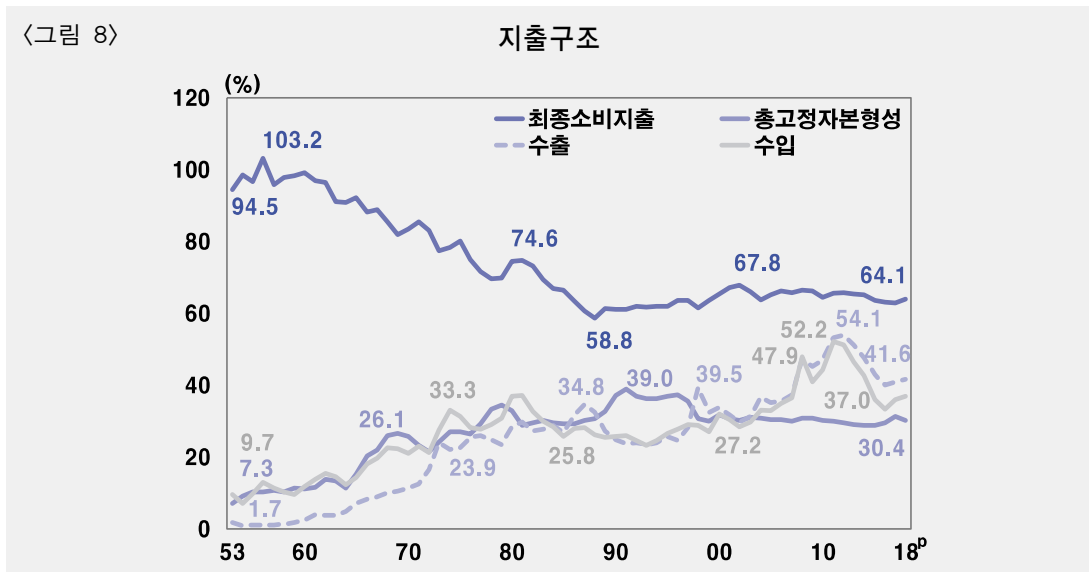
생산구조¹⁾

	생산구조 ¹⁾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농림어업	48.6	39.3	29.0	16.0	8.4	4.3	2.4	2.0
제조업	7.9	12.3	19.0	24.7	27.7	29.3	30.2	29.2
전기가스수도사업	0.4	0.6	1.4	2.3	2.2	2.9	2.1	2.1
건설업	2.2	3.3	5.1	7.7	9.6	6.1	5.0	5.9
서비스업	39.8	42.0	43.8	48.0	51.4	57.2	60.1	60.7

주 : 1) 명목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나. 지출구조

동 기간중 지출구조 변화를 보면 1980년대말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최종소비의 GDP 대비 비중(94.5% → 64.1%)은 민간소비 비중이 1953년 86.5%에서 2018년 48.0%로 하락하였음에도 정부소비 비중이 8.0%에서 16.1%로 높아지면서 1990년대 이후 60%대 중반 수준에서 횡보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총고정자본형성 비중(7.3% → 30.4%)은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수출(1.7% → 41.6%) 및 수입(9.7% → 37.0%) 비중은 대외교역이 증가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표 29〉 지출구조¹⁾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최종소비지출	94.5	99.4	83.6	74.6	61.2	65.4	64.6	64.1
민간	86.5	85.1	73.7	62.7	50.2	54.5	50.4	48.0
정부	8.0	14.2	9.9	11.9	11.0	10.9	14.2	16.1
총고정자본형성	7.3	11.2	25.9	32.9	37.3	31.8	30.2	30.4
건설투자	5.5	7.8	17.6	17.7	20.6	15.1	15.2	15.3
설비투자	1.7	3.1	7.7	14.3	14.3	12.4	9.6	8.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1	0.3	0.6	0.9	2.4	4.2	5.4	6.2
민간	-	-	19.7	25.8	32.1	26.4	25.0	25.9
정부	-	-	6.1	7.1	5.3	5.3	5.2	4.5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7	2.6	11.4	28.4	25.0	33.9	47.1	41.6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9.7	12.0	21.1	37.1	25.8	32.2	44.3	37.0

주 : 1)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한편 가계소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와 국외소비) 대비 국내소비(거주자 가계의 국내 소비와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의 비율은 거주자 가계의 국외소비 증가로 1970년 100.1%에서 2018년 97.9%로 낮아졌다. 국내소비를 형태별로 보면 2000년대까지 서비스 소비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등 재화 소비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이어지다 2010년대 들어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표 30〉 가계소비의 형태별 구조¹⁾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국내소비	100.1	100.3	99.8	99.6	98.2	97.9
내구재	2.3	3.3	10.4	10.8	9.3	10.1
준내구재	12.8	13.3	9.9	9.0	9.0	9.4
비내구재	54.4	49.2	33.4	26.1	22.1	21.4
서비스	30.6	34.5	46.1	53.7	57.8	57.0
거주자 가계의 국외소비	0.1	0.4	1.5	1.8	3.1	3.8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	0.3	0.7	1.3	1.4	1.3	1.7

주 : 1) 명목 가계소비(= 국내소비 + 거주자 가계의 국외소비 -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 대비 비중

국내소비를 목적별로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등 생활필수품 구입 비중은 꾸준히 낮아진 반면 의료보건, 교통, 오락, 스포츠 및 문화 등의 비중은 높아졌다.

〈표 31〉 가계소비의 목적별 구조¹⁾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국내소비	100.1	100.3	99.8	99.6	98.2	97.9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39.7	34.5	22.3	13.2	11.0	11.3
주류 및 담배	6.5	6.7	3.6	2.6	1.8	1.9
의류 및 신발	10.7	10.5	7.4	6.5	6.3	6.1
임대료 및 수도광열	9.4	9.2	12.4	19.5	17.4	17.2
가계시설 및 운영	3.1	3.7	5.4	4.0	2.7	3.0
의료보건	2.7	2.6	3.6	2.6	4.0	5.1
교통	6.2	8.7	11.3	11.8	11.0	10.7
정보 통신	1.0	1.8	4.4	7.4	6.1	5.3
오락, 스포츠 및 문화	2.5	2.2	4.2	4.8	6.5	7.0
교육 서비스	2.7	4.3	5.5	5.3	7.1	5.4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9.9	8.7	8.3	8.7	9.4	10.1
기타	5.6	7.3	11.4	13.1	14.7	14.8

주 : 1) 명목 가계소비 대비 비중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낮아져 2018년 29.3%까지 하락하였으며, 건설투자 비중은 2000년대까지 하락세를 나타내다 이후 50% 내외를 유지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식정보화 진전으로 R&D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표 32〉 총고정자본형성의 형태별 및 주체별 구조¹⁾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건설투자	68.1	53.7	55.2	47.6	50.4	50.3
건물건설	43.0	31.2	37.0	24.5	28.3	37.2
토목건설	25.0	22.5	18.3	23.1	22.1	13.2
설비투자	29.6	43.4	38.3	39.1	31.8	29.3
기계류	17.2	30.2	26.8	29.9	23.9	22.0
운수장비	12.4	13.2	11.5	9.3	7.9	7.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3	2.9	6.4	13.2	17.9	20.4
민간	76.3	78.4	85.9	83.3	82.7	85.2
정부	23.7	21.6	14.1	16.7	17.3	14.8

주 : 1) 명목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중

한편 수출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1953년에는 12.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높아져 2018년에는 82.4%를 기록하였다.

〈표 33〉 수출입의 GNI 대비 비율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총수출 ¹⁾	2.9	3.5	13.8	32.1	26.1	35.4	49.2	43.6
(재화) ²⁾	1.5	1.4	8.5	24.8	21.5	28.9	41.2	36.7
총수입 ³⁾	9.6	11.9	21.5	41.7	26.9	34.3	46.2	38.8
(재화) ²⁾	9.5	10.4	18.4	32.9	22.3	26.9	36.3	29.8
수출입의 GNI 대비 비율 ⁴⁾	12.5	15.4	35.4	73.8	53.0	69.8	95.4	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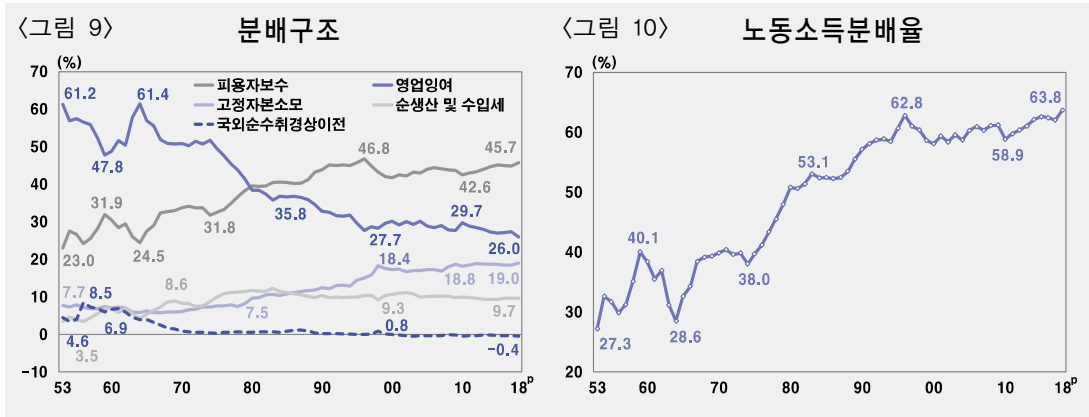
주 : 1) 국외수취요소소득 포함
3) 국외지급요소소득 포함

2) F.O.B. 기준
4) (총수출 + 총수입) ÷ 국민총소득(GNI)

다. 분배구조

1953~2018년중 분배구조의 변화를 보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23.0% → 45.7%)은 임금근로자수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 비중(61.2% →

26.0%)은 하락하였다.¹³⁾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도 1953년 27.3%에서 2018년 63.8%로 상승세를 보였다.



〈표 34〉 분배구조¹⁾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피용자보수 ²⁾	23.0	30.4	33.8	39.6	43.8	41.8	42.6	45.7
영업잉여 ²⁾	61.2	48.8	50.8	38.4	32.9	30.2	29.7	26.0
고정자본소모	7.7	7.1	6.1	9.6	12.5	17.3	18.1	19.0
순생산 및 수입세	3.5	6.9	8.4	11.7	10.4	10.7	10.0	9.7
국외순수취경상이전	4.6	6.7	0.8	0.6	0.3	0.0	-0.4	-0.4
노동소득분배율 ³⁾	27.3	38.4	39.9	50.8	57.1	58.1	58.9	63.8

주 : 1)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대비 비중

2)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포함

3)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단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모두 포함

13) 한편 고정자본소모의 비중(7.7% → 19.0%)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본축적 증가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Ⅵ. 기대효과

2015년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실상의 올바른 파악,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하며, 정부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자료로서 국민계정의 유용성을 높임으로써¹⁴⁾ 최근의 경제환경 및 통계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명목GDP 규모, 실질GDP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노동소득분배율 등 국민계정 주요지표와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GDP 등 총량지표를 1953년(분기기준 1960.1/4분기)부터 소급·제공¹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장기 시계열 분석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분배국민소득반 반장 이관교>

- 14) 가계 혼합소득을 신규 공표하고 경제주체별 소득지표를 다양한 기준으로 제공하는 등 분배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자료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에 부응하였다. 또한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이루어지는 공유경제를 포착함으로써 국민계정체계 내에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현물수혜의 범위 확대, 재정통계간 연계성 제고 등 정부계정을 개선함으로써 정부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자료로서 국민계정의 유용성을 제고하였다.
- 15) 경제주체별 경제활동의 상세분석 등에 활용되는 제도부문별 소득 및 자본 계정은 1975년부터, 정부계정은 1970년부터 제공한다.